

鄭-文 후보 단일화 급진전

재야시민단체 인사들 적극 중재 ‘단일화 시점’은 이견...진통 예상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사이의 단일화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야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중재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단일화 시점을 놓고 두 후보 간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숙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병모 변호사 등 재야시민사회단체 9인 모임은 지난 4일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단일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중재안을 마련, 5일 중에 양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최재천 대변인은 “오늘(5일) 중 1차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되면 다시 이견을 조율해서 좁혀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일화 시점을 놓고 문 후보는 16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 후보 측은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



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 및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한 의원이 들고 있는 신당과 창조한국당 합당 추진안. /연합뉴스

이어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문 후보 측은 최대한 단일화 시점을 늦춰서 자신의 정책비전과 경쟁력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반면, 정 후보 측은 현

재 지지율에서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조속히 단일화를 마무리해서 본인 시너지 효과를 키우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9인 모임에 위임할 권한

의 한계와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전권을 위임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정 후보 측은 시기와 중재모임의 구성 문제 등을 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시민사회 측 사람들이 전권을 위임해주면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신당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정 후보 측은 관철인데 오히려 의원들이 결사반대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듯 접근하면 시너지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는 단일화 문제와 관련, 이날 장유식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저는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하지 않으며, 무원칙하게 손만 들어주는 아랍의 정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저의 결단은 ‘제가 대선승리의 책임자라는 것을 진검승부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park@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전남교육연대는 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초·중등교육과정 전면 개정하라”

교육연대, 10대 교육 정책과제 대선 공약 선정 촉구

26개 시민·사회·교육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교육연대가 10대 교육 정책과제를 선정해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5일 광주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산어촌, 빈곤아동, 장애인, 이주 노동자 및 국제 결혼 가정 자녀 등 교육 소외 계층의 교육권 확보 ▲고교평준화 전면화와 외고 등 특목고 정책의 전환 ▲교육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 자치 실현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에는 또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평생 직업교육 체계 기반 구축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율성 보장 ▲청소년 인권 및 건강권 확보 ▲자율성과 전문성 중심의 교원정책으로의 전면 개편 ▲공교육을 통한 5·18 민주화정 정신 계승 ▲문화수도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함께 포함됐다.

교육연대는 “그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 대통령’을 외치며 교육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했으나 교육 논리가 아닌 효율과 경쟁의 경제논리로 접근해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연대는 또 10대 과제를 공약에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 오는 1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시민 우롱한 예산심의 거부 사태

사표 냈던 市간부 “시의원과 화해했다” 발표

광주시 여성 간부의 특정 의원에 대한 예산심의 거부 사태로 빚어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당사자들은 대화를 통한 합의와 공개 사과로 사태를 갈무리했지만 지방자치를 희화화(戲畫化)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광주시 남성속 여성청소년정책관과 유재신 광주시의원(민주·광산2)은 5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대화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 발전의 계

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유 의원과 남 정책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합의문 성격의 ‘상대방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남 정책관은 이 글에서 “집행부와 의회 예산심의에 불편을 끼친 점에 정중히 사과한다. 화해과정에서 문제의 일부 표현과 표현방식이 여성이나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무시, 폄하 아니라 의욕적인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감사만을 염두에 두고 그 책임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미처

헤아리지 못해 질의과정에서 수용하기 힘든 표현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남 정책관의 예산심의 거부사태로 빚어진 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10여일만에 사실상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사표를 제출한 남 정책관의 거취는 박광태 시장의 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 정책관은 지난달 성명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유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폭압적 자세를 보였으며 예산 심의를 거부했고, 유 의원과 시의회는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97년 DJ비자금·2002년 병역비리·2007년 BBK

대선때마다 ‘檢風’ 파괴력

를 앞서가던 이 후보의 두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김대중씨가 제기하면서 불거진 사건이 검찰의 수사를 촉발시킨 것. 수사기간 이 후보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대선 정국은 소용돌이 쳤다.

앞서 1997년 15대 대선 때는 2002년과는 달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됐다. 대선을 2

개월 여 앞둔 97년 10월 당시 신한 국당은 김대중 새천년국민회의 후보의 67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대단한 폭발력을 가진 의혹이었지만, 2주일 뒤 당시 김대중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분열, 경제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수사 기술상 대선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15대 대선 이후로 ‘수사 유보’를 발표하면서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소멸됐다.

올 대선은 ‘BBK 선거’라고 할 정도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BBK 관련 의혹이 최대의 변수로 꼽혀왔다. 그리고 검찰이 선거를 2주 남겨놓고 의혹 당사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모든 의혹을 클리어 시킴으로써 이 후보측으로부터는 큰 환영을, 상대 후보들로부터는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부터 선거방송토론회 시작

12·19 재·보선 현장

오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남지역 3곳의 단체장 재·보선 후보 초청토론회가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해남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충식, 민주당 정두채, 무소속 이석재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일 오후 1시50분부터 목포

MBC 공개홀에서 열린다.

장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한중, 민주당 김홍주, 무소속 김양수·이 청 후보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오후 2시10분부터 광주MBC 공개홀에서 개최된다.

또한 장흥군수 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KBS광주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리며 대통합민주신당 이명흠, 민주당 백도선, 무소속 김성 후보가 참석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고건 “대선 관여 안할 것”

고건 전 총리는 5일 “지난 1월 대선 불출마 및 불관여 원칙을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등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전 총리 측근인 김덕봉 전 총리 공보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전 총리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 전 총리는 최근까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선대위 중진들의 영입 제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JP “이명박 후보 지지”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는 5일 검찰의 ‘BBK 추가조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 직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정권교체를 위해 많이 돕겠다”며 사실상 이 후보 지지사를 천명했다.

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전 총재가 조금 전 전화를 걸어와 ‘한나라당 전 당원이 이 후보를 믿고 힘을 합쳐 뭉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래서 사필귀정으로 결정이 난 것 같다.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 고구려여!

광개토대제시여!